

Contents

- 01 권두언
'희망' 원년, '일자리' 로 보답하겠습니다
- 03 이달의 논단
- 일자리 창출과 지방정부
-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창출
-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창출 방안
- 09 자치단체 탐방
산천어의 고장,
산과 물이 어우러진 생태보전특구 화천

- 11 자치단체 우수사례
부곡동, 살고 싶은 문화마을 만들기
- 13 도시통계
최근고용동향
- 16 연구원동정
1월 연구원소식

KRILA_2011

2011년 1월호

제 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Newsletter 통권 제18호
발행인 한표환
편집인 뉴스레터 위원회
발행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락처 TEL. 02-3488-7300
FAX. 02-3488-7309
디자인 인터미디어 성림디앤피

※ 본 뉴스레터는 매월 말 발간됩니다. 정기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성함, 연락처, 주소, 이메일 주소를 기입하여 아래 메일주소로 신청하여 주십시오. (무료)

e-mail : newsletter@krila.re.kr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홈페이지(www.krila.re.kr)에서 Newsletter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희망' 원년, '일자리' 로 보답하겠습니다



김완주
전라북도 도지사

어슴푸레 냉기 가득 한 구름 너머로 신묘년 새해의 첫 태양이 뜨면서, 새로운 10년의 출발이자 실질적인 민선5기의 원년도 막을 올렸다. 대내외 불안한 경제상황과 유례없는 강추위로 몸과 마음이 움츠러드는 시기지만 '하나되어 전북을 바꿉시다'는 구호아래 고루 잘사는 따뜻한 전북 만들기를 향한 도민의 열정은 어느 해보다 뜨거워 보인다. 이러한 도민의 모든 바람을 도정에 담고자 지난해 전북도청은 '도민이 바라는 민선5기 역점추진 분야'에 대한 ARS조사를 실시하였다. 수많은 도민의 참여로 성공적으로 마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민들은 새만금 개발 및 전략산업육성 등 성장잠재력을 담보하는 미래산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첫째는 일자리(38.4%), 둘째는 민생(23.8%)을 이제 막 민선5기 출항의 돛을 올린 전북호의 큰 나침반으로 꼽았다.

어슴푸레 냉기 가득 한 구름 너머로 신묘년 새해의 첫 태양이 뜨면서, 새로운 10년의 출발이자 실질적인 민선5기의 원년도 막을 올렸다. 대내외 불안한 경제상황과 유례없는 강추위로 몸과 마음이 움츠러드는 시기지만 '하나되어 전북을 바꿉시다'는

이에 도청은 도민의 염원 담아 "일자리가 곧 복지이며 단 하나의 일자리라도 소중히"라는 마음으로「일자리창출로 활력있는 전북」을 민선5기 정책비전으로 설정하였다. 적어도 지속적으로 고용률 60%이상, 상용근로자수 250천명 이상을 달성하여 도민들이 일터에서 희망을 찾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도정의 초점을 일자리에 두었다. 또한 '나의 아들·딸을 일터에 보내는 심정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도민이 원하는 일자리임을 자각하여 일자리에 대한 개념을 '괜찮은 일자리'로 엄밀하게 해석하였다. 즉 안정적인 생계유지 및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경제침체기 주력했던 사회안전망 차원의 임시적 일자리 창출을 지양하고 4대 보험 및 최소 1년 이상 고용계약이 유지되는 '괜찮은 일자리' 44천개 창출을 목표로 삼아 도민분위 행정의 초석을 닦았다.

이를 위해 전국 최초로 일자리 중심 조직개편 단행으로 지난 7월 30일 일자리창출정책관실을 신설, 기획·조정·평가 기능을 강화하여 일체화된 '일자리시스템'을 마련하였고 전실·국에 분야별 일자리담당 10개를 신설하여 일자리 중심적 도정 수행 체제를 구축하였다. 또한 일자리창출사업 발굴을 위한 범도민적 역량을 결집과 사회적 합의를 도출시키고 지역 내 실업과 고용대책 등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

기 위해 시·군, 유관기관 및 단체, 각급 연구기관 등 일자리 관련 10개 분야 164명의 「범 도민 일자리창출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였다.

■ 15만 제조업 종사자 시대를 향하여, 더 많은 일자리를!

‘낙후된 전북’ 이미지를 탈피하고 산업고도화 촉진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다지기 위해 전북 지역경제의 취약점으로 꼽히는 제조업 분야 투자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자리 중심형 기업 100개 유치를 통한 6,000개 일자리 창출, 민선5기 총 24,000개의 일자리 창출을 실현하여 ‘기업하고 싶은 전북’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우선 향토기업+일자리와 범도민 향토기업+릴레이식 MOU 체결로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고,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청년을 신규로 채용하는 우수기업에는 인건비를 보조하는 토탈 인센티브제(1인당 월 80만원, 2년이상 장기 고용시 6개월 추가)를 시행하여 기업과 도민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제조업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고 있다.

■ 신성장동력과 R&D, 더 좋은 일자리를!

자동차, 기계, 부품소재, 조선, 태양광, 풍력, 식품산업, 인쇄전자, RFT 등 부가가치가 높은 전북형 신성장동력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여 지금의 일자리뿐 아니라 미래 먹거리를 위한 대책도 동시에 강구하고 있다. 또한 전략산업 대형국책사업과 R&D를 통한 신산업 유치를 추진하고 금형, 주조, 도금, 열처리 가공 등 기초공정산업인 뿌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제조업과 더불어 미래지향적 일자리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청년에게 보람찬 일터!

청년일자리 해소를 위해 매년 배출되는 대학(원)생의 10%를 대상으로 산·학·관 커플링사업, 기업주문식 인력양성사업, 맞춤형기술인력지원사업 등 청년일자리 창출을 적극 추진하여 청년층 구인·구직 미스매치(부조화)를 해소를 꾀하고 있다. 또한 ‘청년취업2000’을 실시하여 청년실업자에 대한 정규직으로의 취업기회 제공 및 기업의 우수인재 확보에 도움을 주고 있다. 구인구직 미스매치 해소, 취업지원 뿐

만 아니라 청년창업에도 적극 지원하여 도내 20~30대 청년창업 준비자 매년 400명을 대상으로 경영노하우와 전문교육 실시, 전북신보의 특례보증을 통한 자금지원(최고 3천만원), 경영사후관리 제공 등 성공창업을 유도해 나가고 있다.

■ 더불어 사는 ‘우리’의 일자리를!

정부로부터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전북형 사회적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 현재 총 25개 기업, 730명 고용창출을 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서 나아가 친환경, 농식품, 문화예술, 복지 분야 등 전북만의 특성을 지닌 사회적기업으로 전환 가능한 사업과 단체·기업을 발굴하고 발굴된 단체·기업 등을 대상으로 자립을 위한 사업모델 개발, 컨설팅에 중점을 두고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골프장 및 작은 도서관 설립, 관광숙박시설 확충, 향토산업 마을 만들기 등 ‘녹색·느림·웰빙·관광’이라는 새로운 트렌드를 반영하여 문화관광·식품·생태 일자리 등 다양한 「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노인돌봄 데이케어센터 시설확대, 장애인직업재활센터를 통한 취업알선, 베이비 부머의 귀농·귀촌 유치, 이주여성에 대한 취·창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용접, 절단, 가공, 섬유, 봉제, 목수 등 숨어있는 일자리를 발굴·지원하여 도민 모두가 일자리를 통한 삶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민선5기 일자리정책은 지난해 고용부·행안부 주최 「지역일자리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하여 지역실업난 해결과 청년 고용촉진, 일자리 미스매스 해소, 직업능력개발, 일자리 대책의 창의성과 실현 가능성 등에서 타시·도 일자리 시책에 비해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은바 있다.

전라북도는 ‘손자가 출근하는 모습을 보고 눈감고 싶다’는 어느 어르신의 열망과 ‘영혼을 팔아서라도 취직하고 싶다’는 어느 청년의 간절함을 정책 하나하나, 마음 하나하나에 새겨어 우수시책 대상을 넘어 도민과 진심으로 호흡하는 전라북도로 나아가기 위해 2011년을 일자리원년, 희망원년으로 삼아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달의 논단 _ ①

일자리 창출과 지방정부



조성택
선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한국은 1960년대 본격적인 산업화 전략을 추진한 반세기 만에 세계 13위 규모의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일본, 대만과 함께 한국 경제의 기적은 동아시아 경제 발전모델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아왔다.

그러나 동아시아 경제 발전모델에 대한 회의적 평가가 1997년 외환위기와 함께 거세지기 시작했다. 선진국들은 시장친화적인 접근(market-friendly approach) 시각을 견지하면서 신흥공업국(NICs)에 대해 '사다리 건너차기' 전략을 구사하고, 동아시아 국가들의 국가주도형 발전전략에 대해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1997년 금융위기는 한국의 산업 전반에 대한 구조조정을 압박하는 계기가 되었다. IMF 관리체제 하에 전면적인 시장 개방과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추진된 결과 대량 해고와 고용불안정이 만연했다. 결국 실업 문제는 정부의 개입으로 귀착되었다. 하지만 금융위기 발생 이후 10년간 실업문제는 반전되지 못하였고, 미국발 금융위기가 우리 경제에 여파를 미쳐 경제 불안정에 대한 패닉이 우려되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정부는 기업의 투자 확대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 정책에 역량을 쏟아야 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자리 창출은 이명박 정부의 정책 화두가 되었으며, 민선 5기 지방 선거에서 대다수 후보들의 최우선 공약사항이 되었다.

최근 몇 년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이 정부 부처별로 양산되고 있으며, 사업 내용이 수차례에 걸쳐 변화해 왔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사업을 살펴보면, 그동안 지속되었던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을 종료하고 '포스트 희망근로 사

업'이 계획되었으며, 그 하나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9월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다. 기존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은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대한 재빠른 대응으로 시장지향적 지역 일자리 정책이 수립되었다.

첫째, 2010년 하반기부터 추진되기 시작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아직 초보단계이긴 하지만 취업연계를 위한 네트워크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기반의 마련이 진행되고 있다. 아직은 기업과의 연계 부족으로 인해 시장지향적 일자리 제공이 본격화 되었다고 보기 어렵지만, 지역 중소기업 취업지원 등을 통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정적이고 생산적인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은 정부주도의 사업형태가 아닌 지역 주민 주도의 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과 일자리 확보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지역 주민 스스로 지역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통해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하는 사업으로 '마을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다. 특고세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어 향후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시급하며, 자립형 사업으로 성공하기 위해 지역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셋째, '청년창업 프로젝트' 사업은 3,200개의 창업을 목표로 지방비와 상생기금을 활용한 사업 발굴 및 창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자체의 지역특성과 지역역량에 적합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청년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적 차원의 프로젝트로 추진되고 있다. 다만 소관 중앙부처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아 관련 부처 간 업무협력체계가 수립되어야 하며, 지속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

넷째, '사회적 기업'은 고용노동부가 중요한 정책의 하나로서 추진하고 있으나, 고용노동부와 지자체 간 협력 및 의사소통체계의 제약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지난 6월 11일 제6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사회적 기업 육성은 지자체

의 몫으로 이전되어 지자체 주도의 예비적 사회적 기업 육성이 추진되고 있다.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과 연계하여 지역 특화 사업의 발굴과 육성에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이 지속되어야 한다.

지난 몇 년 간의 일자리 창출 정책의 추진 결과 사회 소외 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과 최저수준의 소득 보장이라는 정책 목표는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시장의 자율적 기능에 의해 추진되지 못한 원인으로 인해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시장주도적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필요할 것이다.

첫째, 현 정부의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라는 슬로건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적했듯이 ‘정부가 주는 일자리가 고작 공공근로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은 무임승차, 지대효과 등의 부정적인 효과를 낳을 수 있으며, 소극적인 복지에 그치는 일자리 제공은 향후 정치적 문제를 낳을 수도 있다.

둘째, 2010년 전반기까지 진행된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실질적인 소득 보장과 안정적인 정규 일자리 제공 차원에서 그 효과가 긍정적으로만 평가되기엔 미흡한 부분이 있다. 일자리 창출은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줄여나가는 대신 시장자율의 ‘좋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야 한다.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과 구직자 간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지방

자치단체의 직·간접적인 지원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취업 연계를 위한 기관 간 협력 시스템의 마련이 필요하다. 고용지원센터, 찾아가는 일자리발굴단, 읍·동의 주민센터 등 취업지원기관 간 협력을 통해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요구된다. 또한 워크넷 프로그램 보완과 함께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워크넷 프로그램 간 호환성 문제도 해결되어야 한다.

일자리 창출은 범정부적 과제인 만큼 각 중앙부처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사업의 중복성 문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기관 간 연계 및 정보공유의 미흡 등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또한 정부 주도의 공공사업 위주의 일자리 제공은 지속적·안정적 일자리 제공에 있어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시장의 실패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정부의 실패로 귀결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속적인 국가 재원부담 문제도 개선되어야 하지만,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의 구체적인 성과가 가시화되어야 할 것이다.

장기적인 산업구조조정 등의 거시정책은 정부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하나 지역 일자리 창출은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역량, 민·관 파트너십의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본다. 정치·시장경제를 필요로 하고, 기업은 정치를 필요로 한다.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적극적이고 지혜로운 대안 마련과 해결을 기대해 본다.



이달의 논단 _ ②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창출



한영수
강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요즘 젊은이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취업이다. 취업은 젊은이들만의 관심사가 아니라 부모님들의 관심사이기도 하다. 그러니 사회 전체의 관심사인 셈이다. 이러한 세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갖가지 묘안들을 짜내는

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지방자치단체, 특히 농어촌 지역의 기초자치단체가 지역주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예산의 한계를 비롯한 중앙정부와의 관계 등 다양한 환경적 요인의 영향 속에서 해답을 찾아야 하는 쉽지 않은 문제인 것이다. 하물며 나와 같은 범인(凡人)의 생각으로 어떤 실마리를 제공하기는 애초부터 기대하기 어렵다. 다만 과학자들이 실험과정에서 기대하지도 않은 발명을 했듯이, 어떤 독자가 이 글을 읽고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희미한 단서라도 발견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망상을 해본다.

잘 아는바와 같이, 지금까지 시행되어 왔거나 시행 중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일자리 창출방법들은 대개 이런 것들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기업을 유치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하나 내지는 몇 개의 큰 기업을 유치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우, 지역 특산품(물)을 생산하는 소규모 기업이나 작업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그리고 사회적 복지 측면에서의 일자리 창출 등과 같은 방법들이다.

이런 방법들은 일반적으로 누구나 다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구체적 사례는 여기에서 다 소개할 수 없을 만큼 많다. 또한 나로서는 그러한 범주를 넘어서는 뾰족한 대안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보다

장기적이면서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얘기나 하고자 한다.

첫째,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이 정보화시대에 적응하고 발맞춰 나갈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마련하여 장래 일자리 창출에 대비하는 것은 어떨까? 다소 먼 날의 얘기일지도 모르겠다. 농업시대에는 농사가 일자리요 소득의 근원이었다고 한다면, 오늘날의 정보화 시대에는 정보나 지식이 취업이나 창업의 기초이며 소득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 도시와 농어촌 간 교육격차의 해소를 통해서 미래의 일자리 창출에 대비해 보자는 것이다.

한 학설(교육불평등설:theories of educational inequalities)에 따르면, 교육이 소득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이라고 볼 때, 교육성취의 차이를 결정하는 요인은 개인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신체적 한계 내에서 환경적 상황에 의해서 학업성취가 결정된다고 한다. 우리나라 농어촌지역에 있는 학교들은 도시 지역의 학교들에 비하여 교육의 환경적 상황이 여러 가지 조건에서 열악하고 이로 인하여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 그것은 곧 정보화 시대에 경쟁력의 약화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농어촌지역의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학업성취도를 높일 수 있다면 장차 지역주민의 취업과 창업의 기초를 제공하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물론 이것은 단기간에, 자치단체만의 힘으로 이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둘째, 근자에 알려진 공정무역과 사회적 기업 개념을 일자리 창출과 연계해서 생각해 보자는 것이다.

공정무역(fair trade)은 종교단체들과 다양한 비정부기구(NGO)들에 의하여 1940년대 선진국 시장에서 공정무역 상품을 상품화하려는 시도가 발단이 되었다고 한다. 공정무역은 공정한 가격을 지불하도록 촉진하기 위하여 조직된 사회운동으로써,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의 수출(주로 수공업품, 커피, 차, 과일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공정무역은 공정무역을 지지하는 기구나 수입 기관들의 연맹체와 생산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무역 경쟁에서 뒤쳐

진(특히 남반구 지역의) 생산자들과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화에 기초를 두고, 생산원가를 포함한 공정한 가격을 지불하도록 한다. 또한 공정무역 관련 기구들은 생산자들과 그들의 마케팅 및 관리 기술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그들의 의식적 변화 운동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무역조건의 발전을 돕는다.

이와 같은 공정무역의 방법을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창출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 그리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농어촌지역의 특산품 생산과 판매의 기반 조성을 위하여 공정무역을 활성화해 보자는 것이다. 우선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간에 협력하고, TV나 신문 등 매스컴의 협조 내지 지원을 얻어 하나의 사회운동으로 전개해 나간다면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것은 우리의 뿌리인 농어촌을 살리고 농어업을 살리는 방법이기 때문에 더욱 의미 있는 일이 될 것 같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담양에는 대나무 돛자리, 죽부인, 복조리 등의 특산품이 있다. 복조리의 경우, 복조리의 역사, 만드는 방법,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그것을 집에 걸어두면 복이 들어온다는 재미난 풍속적 이야기를 담아 공정무역 기관들이 홍보와 함께 판매시장을 넓히는데 노력한다면, 문화상품으로서 판매량이 더욱 늘고,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을까?

한편 사회적 기업의 의미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의 실마리를 찾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사회적 기업은 1970년대 각종 사회복지정책의 확대에 인하여 각 국가들의 재정적 위기가 오면서 국가재원에 의한 사회적 서비스 제공을 사유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이란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직업훈련 및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의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다. 이를 위하여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기업의 성장을 돕고자하는 각 분야 전문가들의 참여를 넓히고, 사회적 자원을 결집시켜 사회적 기업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연구 및 홍보를 통해 사회적 기업에 대한 우호적 인식을 확대하려고 한다.

이러한 사회적 기업의 의미에서 농어촌지역 기초자치단체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지방에는 다양한 지역특산품(물)이 있고, 그 지역출신의 분야별 전문가들도 많이 있다. 자치단체와 시민단체, 그리고 전문가의 참

여를 통하여 의미 있는 특산품을 생산하는 사회적 기업을 만들고 그 역량을 키워간다면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를 들자면, 충북 제천에서는 마을에 공동작업장을 만들고, 조선시대에 장수하는 어른들에게 드렸다는 장수지팡이인 '청려장' 지팡이를 만들어 80세 이상의 마을 어른들에게는 무료로 드리고, 나머지는 저렴한 가격에 다른 지역의 어른들을 위해 판매하여 공동작업장의 상품생산을 유지한다고 한다.

셋째, 농어촌 지역의 노동시장을 활성화하는 방법은 어떨까? 요즘 농어촌 지역에서는 젊은이들의 이농 현상과 기존 농어민의 고령화로 일손이 크게 부족하다. 그래서 이미 농어촌지역의 노동시장은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때로는 농가와 읍내주민들 간의 개별적 관계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도 한다. 자치단체(혹은 주민센터)가 일자리 알선 업무를 상시 지원하거나 대행기관을 통하여 읍·면 단위의 노동시장이 활성화 되도록 체계화 한다면, 이를 통하여 일자리도 창출하고 부족한 농어촌 일손을 돕는 일거양득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넷째, 알려진 기존의 일자리 창출 방법들 중에서 자기 지역 특성에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고, 그것을 특성화 내지 활성화하는 방법은 어떨까? 남들이 하니 유행 따라 나도 하는 식이 아니라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담긴 이야기꺼리가 있는 의미 있는 특산품, 문화상품, 그리고 관광 상품을 만들고 발전시켜 나가자는 것이다.

그것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산업단지 조성이나 개별기업 유치일 수도 있고, 특산품(물)일 수도 있다. 그 구체적 방법들은 참으로 다양하다. 예를 들면, 지역복지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 농어촌과 도시 간의 자매결연을 통한 특산품의 생산·판매, 마을회관에 모여 새끼 꼬기 및 가마니 짜기, 지팡이 등 관광 상품 생산, 봉제 등 어른들의 소일거리 만들기, 어른들이 초·중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을 역사 및 문화 이야기 들려주기 등 다양한 방법들이 실행되고 있다.

이상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생각을 피력해 보았다. 그런데 이것의 성공을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이나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의지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과 그들의 무감각과 도덕적 양심이 전제 되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달의 논단 _ ③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창출 방안



고승희
충남발전연구원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의 여파로 촉발된 국내 실물경제의 급격한 침체는 생산둔화 및 이에 따른 노동수요의 급감을 야기한 바 있다. 이러한 고용사정의 악화는 경기침체에 기인한 바가 크지만 그동안 지속적으로 고용흡수

력이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최근의 경기회복과 병행한 고용회복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다시 말해, '고용 없는 회복(Jobless recovery)'에 대한 우려가 대두될 수 있다. 더욱이 경기침체에 발생된 실업자의 상당수가 공공부문에 집중 흡수되어 경기회복이 지속되더라도 고용회복 속도는 느려질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으며 또한 최근의 경기회복은 수출부문이 주도한 것으로, 수출주도의 경기회복이 지속된다면 고용 회복속도는 더욱 느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좋은 일자리(descent job) 부족은 청년층의 일자리 기피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으나 최근 국가주도의 다양한 일자리 창출대책은 한시적인 실업대책으로 이러한 니트현상을 해소하는데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일자리 제공을 통하여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한시적인 생계지원을 목적으로 희망근로프로젝트, 공공근로, 청년인턴십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러한 대책들은 당초 취지인 실업자 흡수보다는 비경제활동인구의 참여를 높이는 결과 및 실업대책 간 상충관계(trade-off)를 야기하기도 한다. 희망근로 프로젝트의 경우, 사업 시행 후 공공근로 일자리가 감소하는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 발생, 저소득층의 참여부진, 사업종료 후 참여자 대책부재 등의 한계를 노출하고 있으며 청년인턴의 경우도 사업 종료 후 참여자의 노동시장 연계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재취업 전망이 어두운 실정이다. 또한, 희

망근로, 공공근로, 청년인턴 간 사업내용의 차별성 한계로 일 자리의 유사·중복성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충남의 경우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전국평균인 4.6%에 비하여 9.0%로 높은 상황이다. '00~'08년 기간 중 전국 고용증가율은 연평균 1.4%씩 증가하고 있으나 충남지역의 고용증가율은 동 기간 중 연평균 1.1%씩 증가하고 있어 전국평균을 하회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는 충남의 경우 제조업의 비중이 크게 차지하고 있어 제조업 중심의 양적성장은 확대되고 있으나 제조업이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기술·자본집약형 산업으로 고도화되는 과정에서 고용창출력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바탕으로 충남도를 비롯한 자치단체들이 추진해야 정책방향을 살펴보면 첫째, 주민발의(local initiatives) 일자리 창출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공공주도의 일자리 창출사업에서 민간주도의 고용창출방식으로 점진적 전환하고 기존 공공주도의 일자리 창출사업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주민발의에 기초한 일자리 창출방식(Local Initiatives Program, LIP)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다음으로 지역공동체(communit)자립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지역공동체의 참여유도를 토대로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지역의 특성·자원을 활용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단위(area-based) 지속적·생산적 일자리를 확대하여야 한다. 농·어촌 등 고용취약지역의 부족한 인력난 해소 및 해당 지역민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며 지역단위에서 경제적으로 효과 있는 안정적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연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점을 두어야 할 과제로는 다음과 같은 사업들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직업교육을 실시하여 취업능력을 제고시키고, 산업수요에 부합한 필요인력을 양성·공급하여야 한다. 또한, 단순기능직종에서 시작한 근로자들이 지속적인 훈련프

로그램을 통해 숙련도를 가진 녹색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하여야 한다.

사회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이를 통한 일자리를 창출하여야 한다. 사회적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해 취업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육성된 사회적 기업은 경영지원 등을 통해 안정적 일자리를 창출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비영리법인, 조합, 단체 등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들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여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사회서비스 수요 창출을 위해서는 저소득계층에게 기초보장을 위한 서비스 이용이 가능토록 하고, 중산층 이상 계층에서는 잠재수요 및 유효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접근이 필요하다.

청년층에게 직장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준비된 사회초년생을 양성, 사회 조직생활 경험 축적 및 행정업무의 습득을 통해 취업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한다. 청년층 실업자의 자활기반 확충 및 생계유지,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공공분야 일자리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규 녹색산업의 확대를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에 기여토록 하여야 한다. 신규 녹색산업의 확산은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며, 단·중기적으로 기존 녹색산업의 확대와 비 녹색산업의 녹색화를 통한 산업의 확산이 필요하다.

전략산업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지역내의 우수한 생산기반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전략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 내 전략산업에 적합한 인력양성을 통해 지역성장 동

력 산업과 산학협력을 증진시켜야 한다.

신규창업을 통한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한다. 창업보육센터 및 기술창업학교를 통해 사업화 능력이 미흡한 예비 및 신규 창업자에게 창업기반을 제공하고, 수료생 기술평가 지원, 창업자금 및 컨설팅 알선·연계로 창업성공률을 제고시켜야 한다.

중소기업 분야의 일자리를 창출하여야 한다. 위축된 중소기업의 신규채용 여건을 완화시키기 위한 중소기업 청년인턴 지원 후, 정규직으로 채용을 유도하고 청년층 일자리를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지역 우량 중소기업을 육성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경제상황에 적절한 일자리 정책의 목표 정립 및 성과 평가를 통한 재정사업의 유효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정책 자율성을 확대시킬 수 있도록 하며,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민간기업과의 협력 강화를 통한 수요맞춤형 인력공급 및 노동수요 창출을 위해 노동시장이 유연하면서도 고용 안전망을 갖출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여러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시행되는 일자리 정책이나, 자활지원 사업, 직업훈련 등의 전달체계도 통합하는 방향으로 재편해야 한다. 무엇보다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일자리 창출 전략을 수립하여 단독으로 추진하고 성과를 거두고자 하는 계획은 현 상황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 모델을 만들고 중앙정부와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협력적 네트워크를 형성해 지역고용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자치단체 탐방

산천어의 고장, 산과 물이 어우러진 생태보전특구 화천

- 인터뷰 일시 및 장소 : 2010. 12. 16. 14시 화천군수실 -



정갑철
강원도 화천군수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선, 군수님께서 대외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화천군의 독창적인 브랜드 혹은 문화유산, 관광자원 등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천군의 대표적인 브랜드는 2003년부터 시작된 “얼음나라 화천 산천어축제”입니다. “얼음나라 화천 산천어축제”는 2010년에 우리나라 겨울축제로는 최초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최우수 축제로 지정받았습니다. 산천어축제는 청정이라는 무형자산을 주민소득과 지역발전이라는 유형의 형태로 바꾸어 놓은 사례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산과 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90%를 넘고,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4차선 진입로가 없는 열악한 여건으로 농업 또는 산업유치를 통한 성공은 불가능한 상황에서 2003년 본인이 조선 군수에 당선되면서 청정을 자원화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추진한 것이 “얼음나라 화천 산천어축제”입니다. 산천어(산과 물 그리고



물고기), 쪽배, 수달 등을 선정해서 화천을 청정의 대표 지역으로 전국에 알려 특화(유기농)된 농특산물을 고가로 도시민들에게 판매를 해 보자는 것이 “얼음나라 화천 산천어축제”의 기본 컨셉입니다. 산천어축제는 외국의 겨울축제와 비교를 해도 손색이 없기 때문에 체계적인 마케팅전략을 수립하여 외국인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국제적인 축제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의 적극적인 홍보의 결과, 타임지에 “얼음나라 화천 산천어축제”가 소개가 되고 로이터, 신화사 등 대규모 통신사들의 경쟁적인 보도로 산천어축제 기간동안에는 50여회가 넘게 외국 언론사에서의 축제 소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동남아(말레이시아,싱가폴,대만) 메이저급 여행사 대표를 직접 만나 화천 산천어 투어 제의를 했더니 4계절 화천 관광까지 독점하자는 제의가 있을 정도로 열의를 보이고 있어서 지난해 산천어축제에 8,000여명의 동남아 관광객을 유치하였으며, 금년에는 쪽배축제, 토마토축제장 등에도 연중 많은 동남아 관광객들의 참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캐나다 퀘벡 겨울축제 관계자와 양국 축제발전을 위한 발전방안 세미나 개최등 산천어축제의 본격적인 세계화를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2011년 제5회 세계겨울도시 국제 심포지엄에는 캐나다(퀘벡), 중국(하얼빈), 일본(삿쵸리, 도와다시, 요코테시), 스위스(그린델발트), 핀란드(산타마을), 노르웨이(아이스뮤직페스티벌), 그린란드(누크), 몽골(울란바트르)로 확정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본격적인 산천어축제의 세계화를 추진해 나가는 기틀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군수님께서 재임 기간중 가장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실 역점시책으로 무엇을 둘 수 있습니까?

DMZ를 활용한 상품 개발입니다. DMZ이라는 통제된 제한 지역이 상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아래, 취임 초



국내 최대 생태환경 보고인 DMZ일대에 사파리공원 조성을 비롯해 습지조성사업 등을 구상해 왔습니다. 그 큰 프로젝트가 평화·생태특구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대단위 사업인 만큼 한꺼번에 추진한다는 건 대단히 어려운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단계로 평화의 댐 일대를 특구로 조성하고, 2단계로 평화의 종을 비롯한 종 공원 조성, 물빛누리 카페리 운항, 3단계로 아트파크 조성을 비롯한 백암산 안보관광 코스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인 대한민국 화천군을 세계 대표 평화 상징지역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였습니다.

외국의 경우 작은 것들에 대한 의미 부여를 통해 자원화 해나간다는데 착안해 화천 씨티투어라는 상품을 개발해 냈습니다. 이것은 산재되어 있는 작은 관광지를 패키지로 상품화한 것으로 군에서 준비한 버스를 이용해 산소길, 카페리를 이용한 파로호투어, 평화의 종, 꺼떡다리, 산천어공방, 물레방아공원, 막걸리 시음장, 대장간 등 관광객들이 화천 관광에 대해 간과하기 쉬운 부분까지 체계화시킨 투어로 생각하시면 되고, 향후 연꽃단지, 감성마을까지도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Q3 군수님께서 화천군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어떤 사업들을 추진하고 계십니까?

주민들의 일거리 창출을 위한 단기간적 사업이 아닌 지역특산품 개발을 통한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개천가에 버려진 갈대를 주민들이 가꾸어 이를 축산 사료를 만드는 사업으로 연 3,860명을 투입, 31개소

(36ha)에 대해 총 1,290롤(533톤)을 생산해 117축산농가에 공급하여 33,555천원의 수익을 창출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이 꽃으로 덮인 지역 만들기 일환으로 산국을 식재해 관광객 원화함은 물론, 산국을 이용한 상품(에센스오일, 베개, 차 등)을 만들어 주민들의 일거리창출은 물론 장기적으로 지역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구상으로 추진해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22ha 규모의 산국 식재를 통해 연인원 11,138명 참여). 5개읍면 노인들의 참여를 통해 1년간 산천어 등 2만4천개를 만들어 12월 점등식을 갖고 선등거리(산천어 등 거리)를 조성해 축제 관광객들이 머물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 유발효과 등 또 다른 불거리 창출로 이어져 축제 외에 또 다른 명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Q4 마지막으로 화천군을 찾아오는 외지 관광객을 위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화천군은 38선 이북에 위치해 있다는 것 때문에 마음으로 멀게 느껴지는 동네이나, 실제 전철복선등 경춘 고속도로 완공에 따라 2시간 이내에 올수 있는 이웃한 마을입니다. 따라서 겨울을 제외한 봄과 여름, 가을철에 가볍게 나들이 한다는 생각으로 오시면 대도시에서 느낄 수 없는 북한강변 자전거 100리길, 카페리를 이용한 파로호 여행, MTB산악 자전거 여행 등 다양한 테마를 구축한 곳이 화천군입니다. 또한 세계 30여개국에서 보내온 탄피를 모아 만들어진 37.5톤 규모의 평화의 종 현장에서 평화의 중요성을 느끼고, 다목리에 위치한 이외수 감성마을 및 서오지리에 조성된 3만여평 규모의 연꽃 단지를 적극 추천합니다. 아울러 매년 8월에 열리는 쪽배축제는 강과 계곡에서 즐길 수 있는 최고의 피서가 될 것입니다. 장시간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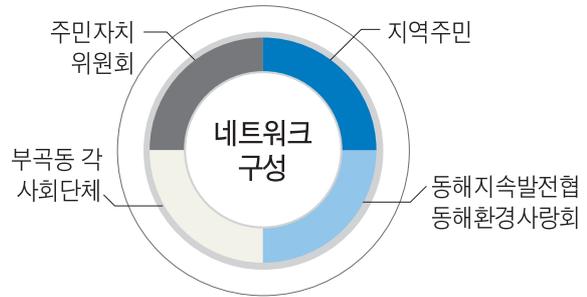
자치단체 우수사례

부곡동, 살고 싶은 문화마을 만들기



김필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 ▶ 부곡동은 강원도 동해시에 속해 있는 면적 5.09km², 인구 7,251명의 아담한 마을
- ▶ 1999년 6월 주민자치센터가 개소된 이후, 다양한 주민자치 활동들을 전개하여 우수한 실적을 올림
- 2004년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우수상, 2005년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장려상, 2006년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장려상, 2008년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우수상, 2010년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최우수상 등 수상



이어서 전통 마을 숲(서쪽 산간지역)과 돌담 마을 해안 숲(동쪽 해안가)을 녹색 띠로(녹색환경)연결 하여 녹색 축을 중심으로 “옛날과 지금 & 먼 훗날이 함께 하는 부곡 문화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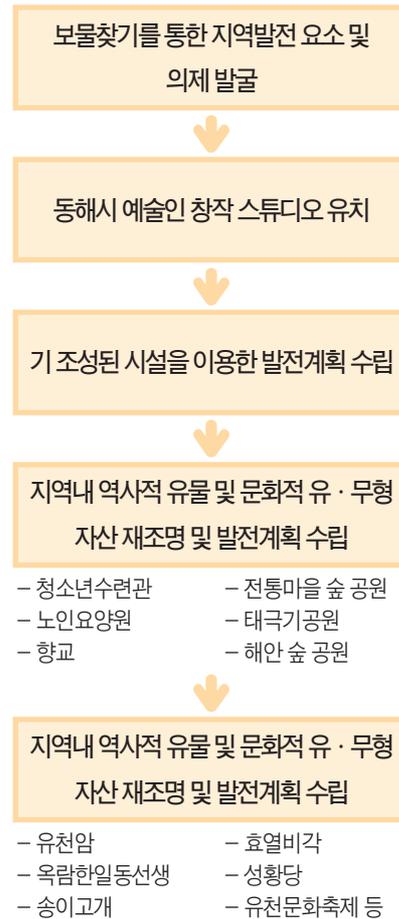
1. 추진배경

부곡동은 동해안 대형산불(2000년), 태풍 루사(2002년), 태풍 메미(2003년), 태풍 메기(2004년) 등 각종 재난이 매년 발생하여 지역 주민에게 많은 재산적인 피해와 정신적인 아픔을 주었다. 이로 인하여 지역 상권은 무력화되고 지역의 경제력은 약화되어 주민의 정서는 피폐해지고, 주민간의 불협화음이 발생하여 지역 공동체가 붕괴될 위기를 맞이하였다. 또한, 기후 변화에 의한 어획고 감소, 동해항권 공단 조성, 대형 아파트 남부권 건축 등으로 인하여 강원도 북부권의 공동화 현상이 현실로 다가와서 부곡동의 위기 상황이 가속화되었다. 이러한 경제적, 사회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부곡동을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드는 일에 주민들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살고 싶은 마을, 부곡동 만들기”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2.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내용

부곡동은 우선, “살고 싶고 머물고 싶고 희망찬 마을”을 만들기 위하여 주민자치위원회가 주축이 되고 동해발전협의회, 동해환경사랑회 등을 비롯한 부곡동 각 사회단체, 일반 지역 주민 등이 참여하는 부곡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네트워크를 구성하였다.



을 만든다는 목표를 정하고 부곡동이 가지고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을 철저히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곡동의 특징을 살리고 부곡동의 보물을 활용한 마을사업의 발굴과 이 마을사업을 구체적으로 시행할 실천계획을 수립하였다.

동해시 부곡동의 “살고 싶은 문화마을 만들기” 사업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지역 문화 유산 보존과 발전, 주민들의 지역주인 의식 찾기, 주민들 간의 소통 공간 조성, 지역 문화 발전, 지역 경쟁력 강화 등의 세부 실천목표를 설정하였다.

지역주민 모두가 참여하는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의 실천을 위하여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과 관련하여 주민의 제안을 공모하고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부곡동의 “살고 싶은 문화마을 만들기” 사업은 1회성의 단기적 행사가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지속되는 사업으로 매년 한 가지 중점사업을 정하여 꾸준히 추진하였다. 그 결과, 2008년은 지역주민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수차례의 워크숍, 세미나, 토론회 등을 거치고 철저한 현장조사와 고증을 거쳐서 전통과 이야기가 살아 있는 부곡동의 역사와 문화 뿌리 찾기 책자를 발간하였다(책자500부 발간).



2009년은 “옛날과 지금 & 먼 훗날이 함께 숨 쉬는 부곡마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부곡동이 자랑하는 문화유산의 성황당 3개소를 정비하고 복원하였다.



2010년은 “이웃과 함께 하는 열린 부곡”을 만들기 위하여 10개 통에 「녹색 동네 쉼터」를 만들었다.



3. 향후 계획

부곡동은 『살기 좋은 마을 부곡동』을 만들기 위하여 승지동 솔밭부터 1동 해안 숲 간 테마 거리 조성/승지동 진입로 번가미술 길거리 조성/유천암 및 선돌 복원사업/향교 앞 고속돌교각 다리 일체화 및 주변 체험장 설치/동해시 창작스튜디오와 연계한 문화 체험장 및 전시관 설치/녹색문화 쉼터 조성으로 지역 주민의 문화 복지 향상을 위한 테마 프로그램 개발/동해 향교와 연계한 인성, 예절 교육 체험관 및 교실 운영/주도로 번가미술 길 조성/일출 빌딩부터 2동 굴다리 전까지 추억의 사진 길 조성/2동 재난 지역 공원화 사업 및 해안 숲까지 체험로 설치/부곡동 이미지 거리 조성/부곡삼거리 부곡동 랜드마크 조성/부곡동 태극기 공원 ~ 목호대교 간 역사의 거리 조성/터미널부터 해안도로 경유 목호항 입구 도로 설치/남호초교 이전 후 대안 계획/2012년 준설도 매립 시작 사전 환경적 및 지역 현안문제 검토 등 다양한 사업들을 매년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도시통계

최근 고용동향

하능식(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 한국은 상대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잘 극복하여 경기가 회복되면서 '09년 취업자 감소폭은 7만 1천명으로 예상보다 크게 축소
- 그러나 과거와 같은 고도성장을 기대하기 어렵고, 성장의 고용효과가 낮아 앞으로 일자리 부족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
- '95~'06년 사이 한국의 고용탄력성*은 0.214에 불과하며, 이는 미국의 0.629, 독일의 0.833, 일본의 0.310 등에 비하면 상당히 낮음

* 국내총생산 1% 증가시 고용이 증가하는 비율(%)

<표 1> 주요 고용지표의 추이: 2004~2009

(단위: %, 천명)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경제성장률(GDP)	4.6	4.0	5.2	5.1	2.3	0.2
경제활동인구	23,417	23,743	23,978	24,216	24,347	24,394
경제활동참가율	62.1	62.0	61.9	61.8	61.5	60.8
취업자	22,557	22,856	23,151	23,433	23,577	23,506
(증가율)	1.9	1.3	1.3	1.2	0.6	-0.3
(증감수)	418	299	295	282	144	-71
실업률	3.7	3.7	3.5	3.2	3.2	3.6
고용률	59.8	59.7	59.7	59.8	59.5	58.6

주: 1) 실업률 = 실업자수/경제활동인구

자료: 통계청

2) 고용률 = 취업자수/15세이상생산가능인구

- 남성 고용률은 선진국과 비교하여 낮은 편이 아니나 여성 고용률이 크게 낮은 수준
- '08년 15~64세 남성 고용률은 74.4%로 OECD 평균 수준에 근접하지만, 여성은 53.2%로 다른 국가들과 커다란 차이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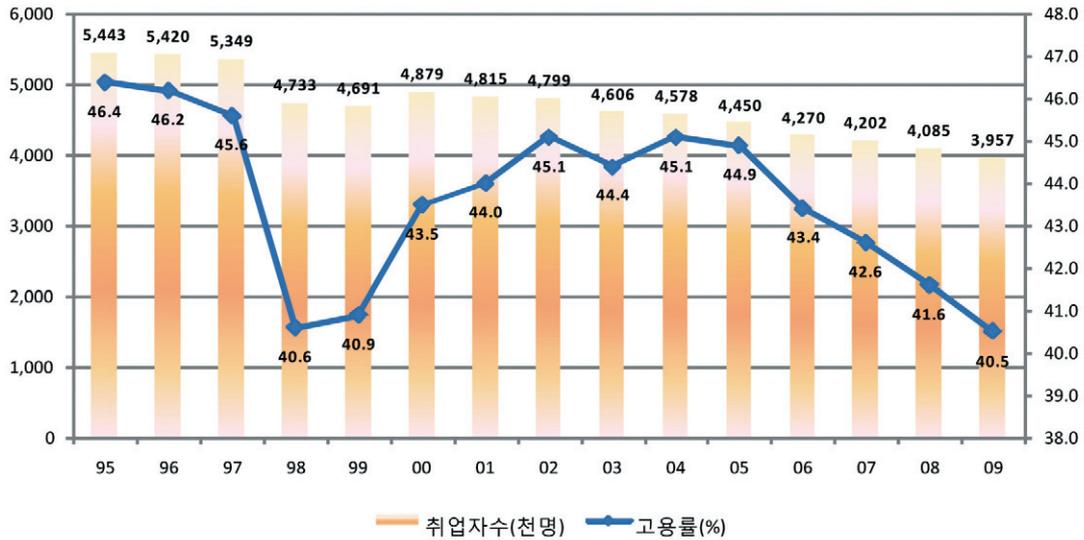
<그림 1> 주요국의 성별 고용률: 2008년, 15~64세



자료: OECD(2008), "OECD Employment Outlook"

- 청년층 취업난이 고용률을 낮추는 주요한 원인의 하나로 작용
- 특히 지난 4년 동안 청년 고용률이 연속 하락하여 '09년에는 40.5%에 불과하고, 이는 외환위기가 한창이던 '98년의 40.6%보다도 낮은 수준

<그림 2> 청년층(15~29세)의 고용률 추이



- 실업률은 '08년 초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나 최근 특별·광역시 중심으로 증가세를 나타냄

<표 2> 최근 시도별 실업률 추이

(단위: %)

시도별	2008 1/4	2008 2/4	2008 3/4	2008 4/4	2009 1/4	2009 2/4	2009 3/4	2009 4/4	2010 1/4	2010 2/4
전국	4.4	4.0	3.3	3.6	3.7	3.7	3.5	3.2	3.2	3.6
서울	5.1	4.8	4.3	4.6	4.7	4.8	4.5	4.0	3.9	4.5
부산	7.1	5.7	3.9	4.1	4.4	4.3	4.2	3.9	3.8	4.3
대구	4.9	4.8	4.2	4.4	4.2	4.2	3.7	3.6	3.6	4.3
인천	5.4	4.7	4.0	4.4	4.5	4.6	4.4	4.1	3.9	4.6
광주	.6	5.1	3.8	4.6	4.3	4.3	4.2	3.9	3.8	3.8
대전	4.8	4.6	3.9	3.8	4.2	4.4	4.4	4.1	3.6	3.6
울산	4.2	3.4	2.5	3.2	3.6	3.5	2.9	2.6	3.5	4.2
경기	3.9	3.6	2.8	3.4	3.7	3.9	3.6	3.4	3.2	3.9
강원	2.6	2.4	1.9	2.0	2.1	1.8	1.3	1.8	1.7	2.0
충북	3.6	3.5	2.6	3.1	2.7	2.2	2.1	2.2	2.2	2.1
충남	2.8	2.9	2.7	2.9	2.3	2.6	2.4	2.2	2.4	3.0
전북	3.1	3.1	2.5	2.7	2.7	2.5	2.5	2.3	2.2	1.9
전남	3.3	3.1	2.3	2.3	2.5	2.3	1.7	1.7	2.0	1.6
경북	3.4	2.7	2.2	2.2	2.6	2.4	2.2	2.0	2.1	2.7
경남	3.5	3.3	2.5	2.5	2.4	2.7	2.3	2.4	2.2	3.0
제주	3.0	2.6	2.2	1.9	2.5	2.5	2.1	2.1	1.9	1.6

- 고용률은 대도시 지역에 비해 농촌지역이 많은 도에서 높게 나타남
- 대도시 중에서는 인천이 가장 높고 부산이 가장 낮으며, 도 중에서는 제주와 경북이 높고 전북이 가장 낮음

〈표 3〉 최근 시도별 고용률 추이

(단위: %)

시도별	2008 1/4	2008 2/4	2008 3/4	2008 4/4	2009 1/4	2009 2/4	2009 3/4	2009 4/4	2010 1/4	2010 2/4	2010 3/4
전국	58.5	60.4	59.9	59.4	57.4	59.3	59.1	58.7	57.0	59.6	59.3
서울	59.5	60.1	59.8	59.0	57.8	58.4	57.8	58.3	57.5	59.3	59.3
부산	54.9	55.9	55.1	54.7	54.0	54.5	53.9	54.1	54.0	55.0	54.2
대구	56.4	56.9	56.3	56.3	54.8	56.3	57.3	57.2	56.0	57.9	57.1
인천	58.5	59.5	58.9	58.9	57.0	59.6	59.9	59.2	57.8	60.0	60.0
광주	56.4	56.9	55.7	56.3	54.8	56.8	57.1	57.0	56.4	58.0	57.2
대전	57.1	58.0	57.4	58.1	56.6	58.0	57.8	56.7	55.6	57.4	57.5
울산	58.8	60.0	59.9	59.4	58.0	57.9	57.8	58.1	56.9	58.6	58.8
경기	59.3	61.0	60.5	60.0	58.0	59.3	59.4	59.0	57.6	59.7	59.5
강원	52.6	60.2	59.9	58.3	53.8	60.4	59.9	57.0	50.5	58.3	59.2
충북	55.6	60.7	60.9	59.5	55.7	61.2	61.2	59.4	56.2	61.7	61.4
충남	59.1	64.7	63.3	61.6	57.1	62.4	62.3	60.4	56.5	62.3	62.3
전북	56.4	60.5	59.5	58.5	56.4	59.4	59.4	57.7	54.7	59.3	58.2
전남	62.0	63.9	63.9	64.2	61.6	65.3	64.6	64.0	61.7	63.4	61.4
경북	59.5	63.4	63.7	64.3	60.3	63.0	63.2	62.1	58.8	64.5	63.9
경남	59.7	61.9	61.2	60.8	58.6	61.0	60.0	58.7	57.1	60.1	59.6
제주	66.9	68.3	67.2	67.9	65.9	66.3	67.0	67.8	64.1	64.8	64.4



연구원동정



1월 연구원소식

▣ 지역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공공디자인 세미나』 개최

- 주최: 한국지방행정연구원/국회 미래도시포럼 공동
- 후원: 행정안전부, 지역공공디자인포럼
- 일시: 2010. 12. 17(금) 14:00 ~ 17:00
- 장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하 1층 회의장
- 발표/사회/토론
 - 발표(3인)
 - ① 자치단체 공공디자인 실태 및 진흥방안 - 서울시 사례
 - ② 공공디자인 실태 및 진흥방안 - 충청남도 사례
 - ③ 공공의 가치를 추구하는 커뮤니티 디자인
 - 사회(1인):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연수원 이주희 교수
 - 토론(6인): 공무원, 학회 등
- 진행방법: 3인 발표이후 토론 진행



▣ 2010년도 종무식 및 우수정책과제 시상

- 일 시: 2010. 12. 31(금) 11:00
- 장 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제2회 한일지방자치제도연구회 개최

- 일 시: 2011. 1. 18(화) 14:00~17:30
- 장 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층 세미나실
- 발 표
 - 한국지방행정연구원(KRILA): 신두섭 수석연구원
 - 일본정책대학원대학(GRIPS): 하타케야마 교수

▣ LOGOTRI 컨퍼런스 및 회의 참가

- 주 제: 지역경제개발을 위한 기후변화 적응
- 일 시: 2011. 1. 17~19 (19일:사무국 회의)
- 개최지: 필리핀 마닐라